

# 노동 분야 개혁을 위한 2026년도 프랑스 정부 예산안

이두형 (프랑스 튀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 머리말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7월 15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예산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5.8%를 기록한 재정 적자를 2026년도에는 4.6%까지 줄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에서 약 438억 유로(한화 약 70조 8,648억 원) 상당의 재정지출 감축이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sup>1)</sup> 바이루 총리에 따르면 “매초 5,000유로(한화 약 808만 원)의 빛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약 3조 3,000억 유로(한화 약 5,340조 5,880억 원)을 초과한 상태”라며 재정 적자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국방비 예산이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6년도 국방 예산을 35억 유로(한화 약 5조 6,638억 원) 증액하고, 2027년도에는 30억 유로(한화 약 4조 8,547억 원) 더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보건 분야는 50억 유로(한화 약 8조 912억 원),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은 약 53억 유로(8조 5,767억 원) 등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1) BFM TV, “Jours fériés supprimés, “année blanche”... ce qu’il faut retenir des annonces de François Bayrou sur le budget 2026”, 2025.7.15.

물론 국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등이 남았지만 프랑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접근은 노동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노동 분야 관련 예산안의 큰 틀을 살펴보면 향후 전망되는 정책 방향과 이를 둘러싼 논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실업보험 개혁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그중 하나는 실업보험 개혁이다.<sup>2)</sup> 프랑스 정부는 실업보험 수급자가 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업보험금 수급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업보험 재원 안정성 확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당국은 특히 “합의 해지(ruptures conventionnelles)”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제도는 2008년에 제정된 이른바 “노동시장 현대화 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애초에는 정규직 계약(CDI)에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부 공무원에도 허용되고 있다.<sup>3)</sup> 상호 합의에 따른 노동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한 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고 급여가 높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 “합의 해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실업보험금 수급과 관련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합의 해지”를 통한 경우 퇴사자가 충분한 기간 동안 일을 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등, 요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실제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조사통계지원국(Dares)에 의하면 2024년도 경제적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정규직 계약에서 사임한 경우는 약 185만 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합의 해지”는 51만 4,627건 이뤄졌는데 해고 건수는 58만 2,000건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고와 “합의 해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

2) Franceinfo, “Budget 2026 : François Bayrou prépare une réforme du marché du travail”, 2025.7.15.

3) TF1 Info, “Ruptures conventionnelles : pourquoi sont-elles dans le viseur du gouvernement?”, 2025.7.16.

다. 또 “합의 해지”의 경우 2015년도 약 31만 5,000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0년 사이에 65%가량 급증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조금 감소했지만 이후 프랑스 전 지역과 전 경제 분야에서 “합의 해지” 건수가 급격히 뛰어들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이처럼 실업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합의 해지”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지급되는 실업보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도에 지급된 실업 보험금 총 370억 유로(한화 약 59조 8,870억 원)에서 25%가 넘는 100억 유로(한화 약 16조 1,857억 원) 상당이 “합의 해지”에 따른 실업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됐다.<sup>4)</sup> 이와 관련해 아스트리드 파노시안 부베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합의 해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반면 해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로 구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sup>5)</sup>

2007년 “라르셰르 법(Loi Larcher)”에 따라 정부가 노동과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sup>6)</sup> 그에 따라 오는 주부터 노동조합 등 사회적 파트너와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 해지”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실업보험 수급 자격 기준을 해고 등 다른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노동시간 유연화

실업보험 제도 손질과 함께 프랑스 정부가 노동 분야와 관련해 핵심 개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정부 지출액을 줄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더 많은 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4) Les Échos, “Assurance-chômage : ce nouveau tour de vis auquel réfléchit le gouvernement”, 2025.7.9.

5) TF1, “Bonjour ! La matinale”, 2025.7.16.

6) Franceinfo, “Budget 2026 : François Bayrou prépare une réforme du marché du travail”, 2025.7.15.

이와 관련해서는 주당 최소 노동시간 24시간제를 폐지하고 일요일에도 보다 쉽게 노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 공휴일 수를 줄여 노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sup>7)</sup> 즉, 법정 공휴일 중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일(5월 8일) 두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해 일하는 날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제안 수준이지만 실제 도입될 경우 약 42억 유로(한화 약 6조 8,024억 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기대한다.<sup>8)</sup>

<표 1> 유럽연합 국가별 공휴일 수

사이프러스	15	슬로베니아	12
슬로바키아	14	스웨덴	11
루마니아	14	룩셈부르크	11
몰타	14	이탈리아	11
스페인	14	헝가리	11
크로아티아	14	그리스	11
불가리아	14	프랑스	11
체코	13	에스토니아	11
포르투갈	13	아일랜드	10
폴란드	13	벨기에	10
리투아니아	13	네덜란드	9
라트비아	13	덴마크	9
핀란드	13	독일	9
오스트리아	13		

자료 : Le Figaro, “Les Français ont-ils vraiment plus de jours fériés que leurs voisins européens ?”, 2025.7.17. (Touteleurope.eu / EURES 자료 재가공)

프랑스 정부가 공휴일 일수 조정을 통한 노동시간 확보 방안을 고민하면서 실제 프랑스의 휴일 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주변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더 많은 휴일을 누리면

7) Franceinfo, “Budget 2026 : François Bayrou prépare une réforme du marché du travail”, 2025.7.15.

8) Ouest-France, “CARTE. La France compte-t-elle vraiment plus de jours fériés que ses voisins européens ?”, 2025.7.16.

<표 2> 유럽연합 국가별 유급 휴가일 수와 공휴일에 따른 휴일 수

국가	공휴일 수	유급 휴가일 수	총 휴일 수
사이프러스	15	20	35
불가리아	14	20	34
크로아티아	14	20	34
스페인	14	30	44
몰타	14	30	44
루마니아	14	20	34
슬로바키아	14	20	34
오스트리아	13	25	38
핀란드	13	24	37
라트비아	13	20	33
리투아니아	13	20	33
폴란드	13	20	33
포르투갈	13	22	35
체코	13	20	33
슬로베니아	12	20	32
에스토니아	11	28	39
프랑스	11	25	36
그리스	11	20	31
헝가리	11	20	31
이탈리아	11	20	31
룩셈부르크	11	26	37
스웨덴	11	25	36
벨기에	10	20	30
아일랜드	10	20	30
독일	9	24	30
덴마크	9	25	34
네덜란드	9	20	29

자료 : Le Figaro, "Les Français ont-ils vraiment plus de jours fériés que leurs voisins européens ?", 2025.7.17.  
(Touteleurope.eu / EURES 자료 재가공).

서 노동시간은 그들만큼 적은지에 대한 비교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 국가들의 연중 공휴일 수와 비교해보면 현재 프랑스의 공휴일 수는 11일로 에스토니아,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9)</sup> 그러나 현재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공휴일 수는 약 12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적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휴일 2일을 없애는 경우 유럽연합 국가들 내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과 함께 가장 적은 공휴일 수를 갖게 된다.

법정 공휴일 수에 유급 휴가일 수까지 고려하면 조금 달라진다. 프랑스의 경우 공휴일과 유급 휴가일 수를 더하면 총 36일로 유럽연합 평균인 34일보다 2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안대로 현행 공휴일에서 2일을 줄여도 유급 휴가를 포함한 전체 휴일 수는 유럽연합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휴일 수 조정 방안의 내용과 관련해 2004년에 도입된 성령강림절 월요일의 “연대의 날”과 같은 방식이 거론된다. 즉, 노동자가 공휴일이었던 날에 일을 한 것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받기보다는 추가 노동으로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사회적 기금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sup>10)</sup> 원래는 공휴일이었던 성령강림절 월요일에도 노동자가 일을 하는 대신에 기업은 연간 총임금의 0.3%에 달하는 사회적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는 노령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노동시간 확보나 경제 효과보다는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더 논의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제시하는 공휴일 수 조정은 접근법 차원에서 이와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폐지가 거론되는 두 날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일종의 유급 휴일처럼 적용된다.<sup>11)</sup>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임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두 공휴일을 일하는 날로 전환하면서 이미 받고 있는 임금만큼 노동 기여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일을 한다고 해서 별도로 추가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하지만 “연대의 날”처럼 이 이틀 동안의 노동으로 발생한 추가

9) Le Figaro, “Les Français ont-ils vraiment plus de jours fériés que leurs voisins européens ?”, 2025.7.17.

10) BFM TV, “Deux jours fériés en moins : les Français en ont actuellement 11 et font partie de ceux qui en ont le moins en Europe”, 2025.7.16.

11) Franceinfo, “Suppression de deux jours fériés : quelle est la différence avec la journée de solidarité ?”, 2025.7.16.

적인 경제 수익과 관련해 기업은 사회적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그 비율이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휴일 수 조정과 관련해 바이루 총리는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던 날에 다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 맺음말

이번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적 논의는 물론 국회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반영이 될지 또는 변경이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고자 하는 안건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큰 목표 아래,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 보험 급여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공휴일 단축을 통해 노동시간 확보와 그에 따른 생산성 증대와 경제적 효과를 바라고 있다. 즉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책임과 함께 경제적 활동에 더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은퇴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른바 “콘클라베”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중지부를 찍은 상황에서 노동조합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이 합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공휴일 수 축소와 관련해서도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과 환영의 뜻을 밝힌 경제단체 등 사회적 협의 파트너들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노동 분야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전개 과정은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KLI**